

## 2단계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에 부쳐

### 우리나라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의 장래에 대한 정확한 답은 과연 어떤 것일까? 90년 이후 무려 1조5천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성과는 얼마나 거뒀을까? 이미 돼지고기 수입은 1백% 자유화된 시점을 놓고 볼때 관련 제도나 관행도 개방시대에 걸맞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거리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국제경쟁력 확보 문제는 육종을 비롯한 생산성 향상 같은 단순지표나 논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의 과정 모두가 고르게 국제수준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무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나름의 노하우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이같은 절대적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논하는 자체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부업 위주의 경영규모가 양적인 면에서 전기업화로 발전된 것은 외형적으로나마 분명 발전이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축산분뇨처리 문제나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비롯한 간접적인 경쟁요인들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양돈분야의 지도기능이나 계층간 역할분담이 상호 공동운영체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점도 양돈산업의 조화있는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지적의 대상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양돈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품질개선단지를 비롯,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축적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쫓기듯 시행한 각종 사업이 시행 착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볼때 규모화가 뚜렷하게 진전되는 등 성과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정부는 지금까지 쏟아붓기식 투자에서 관리형 투자로 전환키 위해 바로 「제2단계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양돈업 경쟁 비중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



윤봉중 사장  
(축산신문사)

로 사료비이고 인건비, 자본 부담 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합사료 가공기술은 이미 첨단수준에 도달 했지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효율이 제고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온갖 첨가제를 믹스케 하는 획일적인 성분비의 벽을 허물고, 원료 배합비로 바꿔 가축의 기호성 증진과 원가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고정관념의 두터운 벽을 허물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가 전면개방 됐는데도 사료관련 제도는 원료 확보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직된 과거의 관행이 개방시대 원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와 유연한 대책의 강구가 시급을 요하고 있다. 보다 자유로운 원료구매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판매방법이 오히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이익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생산자 스스로의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지원이다. 최근 일부 양돈인들 사이에서 도입되고 있는 이른바 자가배합 급여방식이 성공을 거둘 경우 약 10%정도 경쟁요인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조용한 혁명이 양돈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원가절감 요인중 가장 비중이 큰 사료부문은 도래한 새 시대 추세에 맞게 여러가지 연구하고 보완함으로써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방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의 경쟁을 의미한다. 품질과 위생+안전성 그리고 가격면에서 우위를 유지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한동안 국내시장보다 돼지고기 수출에 치중하는 정책으로 지나치게 수출에 기대를 거는 양돈인들이 적지 않았다. 물론 돼지고기 수출은 적극 해야 한다. 그리고 근년에 와서 거의 불모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은 당사자의 노력이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대 수입국이 바로 인접해 있고, 대만의 구제역 발생과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수출이 노력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건을 고려치 않고 이상적 목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증거다.

돼지고기 수출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아무리 좋은 여건 위에 있다 해도 일본 단일시장을 가지고 너무 기대를 걸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잔여육 처리 문제나 일본이 요구하는 상품의 규격문제 뿐만이 아니라, 신용확보와 국제교역에 필요한 장사꾼 기질을 비롯, 우리가 보완하여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차상품 가운데 수출전략 상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돼지고기가 지리적 이점을 살려 고가에 수출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 한 예로 규격돈 생산에 의한 고품질 돼지고기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원료돈 생산자들마저 수출돼지 생산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

최근 일부 양돈인들 사이에서 도입되고 있는 이른바 자가배합 급여방식이 성공을 거둘 경우 약 10%정도 경쟁요인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조용한 혁명이 양돈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 수출업체 역시 물량 위주의 수출로 일본의 소비자들이 한국산은 아예 저질육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은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규격미달 내지 안전성 시비로 반품된 사례나 평균 수출가격이 미국산의 57~66%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돼지고기 수출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냉장육 위주의 전문수출업체를 육성하는 동시, 국내 돼지가격 변동과 관계 없이 규격화된 수출돼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 확보와 함께, 잔여육 처리가 이번 대책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국내 양돈산업의 당면과제는 질병 방제와 돼지고기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돈분의 효율적인 처리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현안과제다.

가축질병 문제는 이미 걱정 차원을 넘어 한국 양돈산업의 존폐와 직결된 상태로까지 진전된다. 뿐만 아니라 항생제 같은 치료제를 사용하거나 첨가한 사료를 쓰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손실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다하게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축산물에 잔류되는 유해물질 문제는 양돈산업의 존립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모두가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질병 문제를 대처하지 않을 경우 그 성과는 기대난이다.

돈분을 비롯한 가축분뇨처리도 시원한 대책은 없다. 90년 이후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정부 용역사업이 수없이 전개됐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채택된 것이 없다. 다만 폐수가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이 1차사업 분야에서나마 정착단계에 와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분뇨의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액비나 퇴비로서 토지에 환원하면 유기질 비료로 효용성이 높다는 농업선진국들의 실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토양을 수탈하는 화학비료 공급에만 전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화학비료는 환경과 관계없고 유독 축분 유기질비료에 거부반응이 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선과 편견이 아닐 수 없다. 구라파의 경우를 보자. 축분 거의를 액비화해서 적정량을 시비함으로써 토양을 살찌우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한다. 우리보다 환경문제에 더 일찍 눈을 떴고, GNP가 2~3배 되는 좁은 땅의 EU국가들의 앞서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작목과 토질에 알맞게 축분을 연구해서 적정량을 시비함으로써 토양도 살리고 우수농산물을 생산, 1석2조의 성과를 거두는 환경친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국내에도 일부 양돈인들의 노력에 의해 액비를 실용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축산분뇨처리는 자원화에 승부를 걸어야 함이 강조된다.

아무튼 양돈산업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특권 계층에 짜맞추는 기회제공이 아니라, 경영의 독특한 노하우를 갖거나 가질 수 있는 누구에게나 객관화된 선발기준에 의해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나 기술, 생산자들의 의식을 비롯, 어느 것 하나 막힘없는 토탈비지니스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養豚**